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 강화… 과거사 정리는 ‘미완’

韓日 정상회담 성과·과제

尹 대통령, 안보·산업·문화 등 교류 관련 철저 후속조치 당부

기시다 총리, 강제동원 문제에 사과 대신 ‘유감’ 표명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복원된 서틀외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경제안보 교류 확대를 비롯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분야 확대 등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과국을 치달던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우주·양자·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미래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프놈

펜 한미일 정상회담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정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향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두 나라 정상들 간의 협의 사항은 이제 각 분야별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도문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

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일관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사과 대신 유감 표명으로 같은 점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점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보기엔 아쉽다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강제동원 제3자 피해대상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데 감명 받았다”며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3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대우조선 역사 속으로

한화오션 출범 초읽기

한화그룹에 새 동지를 틈 대우조선 해양이 23일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을 마무리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이사진에 합류해서 글로벌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한화그룹은 8일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에 ㈜한화 지원부문 권혁웅 사장을 부회장 승진과 함께 내정했다. 또 한화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종서 전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와 정인섭 전 한화에너지 대표가 각각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대표에 권혁웅 승진·내정 김종서·정인섭, 사내이사 후보에 김동관 부회장, 이사진에 합류 23일 주총서 회사명 변경 의결

김동관 부회장

권혁웅 부회장

8일 기시다 총리,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과 주요 내빈들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한국 경제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경련

SG發 주가폭락… 재산몰수·무기징역 등 강력처벌해야

금융권, 뒤늦게 제도개선 나서
 폰지사기로 200명, 290억 피해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그쳐
 ‘폐가망신’ 정도의 처벌 목소리

일반 투자자들이 SG발 주가폭락 사태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금융당국이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세조정,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 재발할 수 있다며 이번에 제도를 손질하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공정거래 제도 손질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주가 조작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10년 전 이름을 날렸던 이모씨는 폰지사기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290억원대 피해를 입혔는데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또한 이번 사태와 유사했던 2007년 루보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김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으며, 기획자는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모씨는 출소 후 또다시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식 커뮤니티나 종목토론포방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주가조작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흔드는 주가조작행위를 근절하려면 재산 몰수, 무기징역 등 ‘폐가망신’할 정도의 처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는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거래정지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가조작만 무겁게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 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 행위 관련한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진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와 더불어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분석 및 심리 등이 강화된다.

/원관희 기자 wkh@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檢 정식 수사 전환할까 /사진 뉴시스
 ▲ 강은미, 공공 보건의료시설 신·증축 예타 면제 요구

▲ 행안부, “챗GPT 사용시 민감한 정보 입력 말라”
 ▲ 돈봉투 의혹 ‘강래구’, 증거인멸 질문에 “판사에 말할겠다”



▲ 임신부 공무 수행 중 태아 건강 손상되면 보상받는다
 ▲ 태영호 “이진복, 공천 언급 안 해...제 모든 것 건다” /사진 뉴시스